

문대통령 “4대강 홍수 조절 효과 분석기회”

여야, 전국적 폭우 피해에 4대강 사업 실효성 논란 재소환 민주 “보 물흐름 방해해 강둑 터져”...통합당 “사업 확대했어야”

전국적 폭우 피해로 이명박(MB)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재삼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불붙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삼진강 등지에서 홍수 피해가 커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탓이 크다고 책임론을 퍼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이 국민 안전을 경쟁화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며 “삼진강이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는 사

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 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보 해제까지 강행했다”며 “이제 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폭우라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권 사람들 진짜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비꼬았다.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낙동강 강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으로 건설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면서 강 둑이 못 견딜 정도로 수압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때 삼진강도 했으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4대강 예산을 다시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용 소재로 쓴다”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이 삼진강 등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발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다. 윤 의원은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인데 야당은 남 탓부터 하고 있다.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앞에서 열심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발목 잡는 형국”이라고 항의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함께 거론, “정치가 실종되면서 국

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까지 여야는 진보와 보수로 더 선명하게 대립하며 이제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양측에 자성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저지돼 폭우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에 반박 성격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임은정, 檢 인사 비판한 문찬석 저격

“난세의 간교한 검사...檢 조직적 범죄 자유롭지 못할 것”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10일 제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지검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도 이번 인사를 단행한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채널A 사건 수사를 한 이성운 서울중앙지검 휘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진정권 인사들이 ‘추미에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며 추미에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는 “(문 지검장은)난세의 간교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지검장을 두고 “검사장을 달랐다고 확인한 검사”라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계속 승승장구하며 요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행하는 선배들이 스스로는 물론 나라와 검찰에 위태위태하다 싶어 멀리서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더 조마조마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마다 검찰 개혁이 공약이었던 나라에서 그 시절 잘 나갔던 간부들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와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을 리 있는가”며 “방관하고 침묵한 죄, 막지 못한 죄에서 자유로운 검사는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민주당 “수해 복구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조국 ‘檢 대통령 탄핵’ 음모론 힘심기

김남국·이원욱 “묻혀있던 사건 끄집어내 의도적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 ‘정외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보통 검찰은 정말 명백한 정보를 갖고 있어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수사하곤 했는데 윤 총장의 검찰은 이상했다”며 “수사하지 않고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내다 오히려 덮인 사실을 공표하고 더 대대적으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 자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다시 끄집어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어떻게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충분히 갖게 할 수 있는 정황적 증거가 그렇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너지 특위 공감대 ... 태양광 국조엔 이전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 배경에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발전 확대가 있다며 국정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탈원전과 태양광 정책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전남 구례 수해 피해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을 하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제대로 (복원) 안한 곳에서 토사가 유출돼 수해 피해가 극심했다는 제보들이 많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사태가 나기 전에 탈원전이나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태양광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았다”며 “(태양광) 국정조사까지 할지는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에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탈원전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 산지가 산사태에 노출됐다”고 주장했

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홍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며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수많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감사원 감사와 국조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에너지 특위’ 설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태양광 국조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태양

광 관련 국정조사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당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제안했고 통합당은 ‘에너지특위’를 제안했다”며 “함께 검토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당시 회동에서 태양광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주장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권이 산지 태양광의 폐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하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민주당이 야권의 국정조사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에 대자보 100장 붙인 류호정

‘비동의 강간죄’ 관심 호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였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그는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달 30일 모든 의원실로 법안을 송부했다”며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